EAI 여론브리핑 제23호

(엠바고 : 2008. 3. 20. 21:00 GMT, 한국시간 3.21 오전 6시)

WPO · EAI · 경향신문 공동
UN인권선언 채택 60주년 기념 "국제인권의식여론조사"
WORLDPUBLICOPINION.ORG

3월 21일 국제인종차별철폐의 날
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제2차 "인종차별에 대한 국제인식비교"

[참여국가 : 16개국]

유 럽 러시아 영국 우크라이나 프랑스
아 시 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북 남 미 미국 멕시코
중 동 아제르바이잔 이란 터키 팔레스타인
아프리카 나이제리아 이집트

※ 현재 일부 국가에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최종 22개국에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16개국 14,896명 응답자의 데이터 분석결과만 소개한다.

※ 조사일시 : 2008년 1월~2월

[발표 주제]

주제1. 16개국 인종차별 인식 비교 "인종문제로 본 세계 인권의식"
주제2. "한국인의 인종/민족 평등의식의 허와 실"

[발표계획]

차수	일시	주제	비고
1차	3월 7일	인권1. 여성권과 양성평등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2차	3월 19일	인권2. 중국의 대티벳정책	6개국 조사
3차	3월 21일	인권2. 인종차별	3월 21일 국제 인종차별 철폐의 날
미정	5월 3일	인권3. 언론의 자유	5월 3일 세계 언론자유의 날
미정	6월 26일	인권4. 고문의 인권침해	6월 26일 세계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
미정	미정	인권5. 낙태	
미정	미정	현안1. 정치적 민주주의	정부구성과 운영에서의 민주주의 실현
미정	미정	현안2. 정책결정과 여론	각국 정책결정에 여론의 역할
미정	미정	현안3. 국제위협과 리더십	세계 주요 지도자 평가/중동평화와 UN
미정	미정	현안4. 새로운 위협과 대응	에너지/핵폐기 국제협약/중국-티벳 문제

프로젝트 개요

"미국 매릴랜드 대학의 국제여론조사 연구기관인 국제정책태도프로그램(PIPA) · 월드퍼블릭오피니언(http://www.WorldPublicOpionion.org)은 유엔고등인권판무관(UNHCHR)의 협조 아래 유엔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하여 세계 인권의식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국제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동아시아연구원(EAI원장 : 이숙종 성대 행정학과 교수, http://www.eai.or.kr)과 경향신문(http://www.kyunghyang.com)은 한국 측 조사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한국에서의 조사는 전문여론조사 기관인 한국리서치(대표 : 노익상, http://www.hrc.co.kr) 담당했다. 이번조사는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인권 문제 관련 국제여론조사로서 인권 및 여러 국제현안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다른 나라 국민들과 비교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UNHCHR(유엔고등인권판무관)의 요청에 따라 주요결과는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정한 인권 관련기념일들에 즈음하여 주제별(양성평등/인종차별/언론의 자유/고문/낙태/정치적 민주주의 성숙도)로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인권관련 주제 외에도 국제현안(석유에너지 자원/ 세계 및 지역별 지도자 리더십 평가/ 각국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론의 역할/중동평화와 유엔의 역할/새로운 핵 폐기 국제규약 창설에 대한 입장/ 중국과 티벳)에 대한 국제여론도 소개한다.

2008년 3월 7일
경향신문
EAI 여론분석센터 국제인권의식조사 연구팀

한국조사 개요

○ 전체기획 : 매릴랜드대 국제정책태도프로그램(PIPA) ·
월드퍼블릭오피니언(WorldPublicOpinion.org Network)
○ 한국기획 : 동아시아연구원(EAI) · 경향신문
○ 실 사 : 한국리서치
○ 조사일시 : 2008년 2월 10일~11일
○ 조사대상 :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2006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제주 제외)
○ 표 본 : 600명
○ 표본추출 : 계층화된 무작위 추출(Stratified Random Sampling)
○ 표집오차 : 95% 신뢰수준에 최대 허용 표집오차 ± 4.0%
○ 조사방법 : 전화면접조사
○ 가 중 치 : 지역(권) · 성별 · 세대 가중치 부여
○ 연 구 팀
연구팀장 : 이내영(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교수)
연 구 팀 : 이숙종(EAI 원장, 성균관대 교수) · 서상민(EAI 연구기획국장)
이곤수(EAI 선임연구원) ·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간 사 : 곽소희(EAI 연구원)
연구지원 : Matthew J. Lauer(EAI 인턴) · Lisa Collins(EAI 인턴)

관련문의 :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02-2277-1683(내선102)

주제1. 인종문제로 본 세계인권 의식
인종차별철폐는 보편적 가치이나 현실개선은 아직 멀어

□ 인종차별 철폐는 세계 보편적 가치 : 16개국 90%가 중요한 문제로 인식
- 인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이 인종차별 문제에 둔감한 국가

인종차별철폐에 세계인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UN 인권선언채택 60주년을 기념하여 국제여론조사 기관인 월드퍼블릭오피니언(WorldPublicOpinion.org)이 주관하고 동아시아연구원(원장: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과 경향신문이 참여하여 16개국에서 실시한 국제인권의식 여론조사 결과다.

인종차별의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 물어본 결과 16개국 14,698명 중 90%("매우 중요하다" 69%+"어느 정도 중요하다" 21%)가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와 "기타" 응답은 모두 합해 10%에 불과했다. 인종평등 및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전 세계적으로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영국(97%), 미국(96%), 프랑스(94%) 등 서구 선진국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80~90% 이상이 그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인도인만이 인종평등을 실현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44%, 어느 정도 중요하다 15%로 전체 59%로 낮은 편이었다. 공감의 강도를 고려하여 인종차별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을 따져도 전체 16개 조사국 평균 69%에 달했고 13개 나라에서 과반수를 훌쩍 뛰어넘었다. 구 소연방 소속의 러시아(37%), 우크라이나(50%)나 인종서열의 잔재가 남아있는 인도(44%)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과반수 이하에 그쳤다.

한국 국민 역시 인종철폐문제를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인종평등을 실현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무려 71%로서 조사 대상 16개국 중에서 6번째로 높은 응답비율을 기록했다. 여성평등 문제에 대해 불과 43%만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던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이다. 즉 한국인은 여성평등 문제에 비해 인종평등을 실현하는 문제를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그림1]

□ 인종차별철폐의 공감대에 비해 각국의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 지배적 59%
□ 실질적인 개선 정도는 미흡 : "크게 개선되었다"는 응답은 20%에 불과
- 영미 등 서구 국가들이 자국의 인종차별 개선정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
- 인종차별 실질적으로 개선되진 않아,
- 한국인 인종차별 "크게 개선"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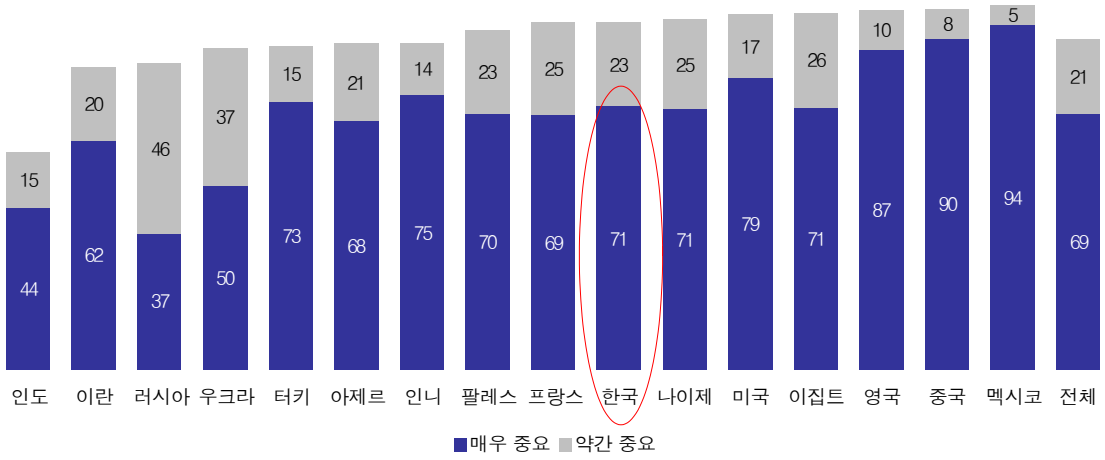
각국의 국민들은 인권차별 현상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다고 보는가? 인종차별 현상이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인종/민족간 평등문제가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매우 공평해졌다 20%+ 약간 공평해졌다 39%)'이 59%에 달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개선정도에 대해 물어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인종간 차별이 과거에 비해 "매우 많이 개선되었다"고 실감하는 응답은 16개국 전체응답자의 20%에 불과했다.

결국 세계적으로 인종차별의 문제를 중시하고 그 해결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크게 확산되고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다고는 보지만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인식과 현실 사이에 큰 갭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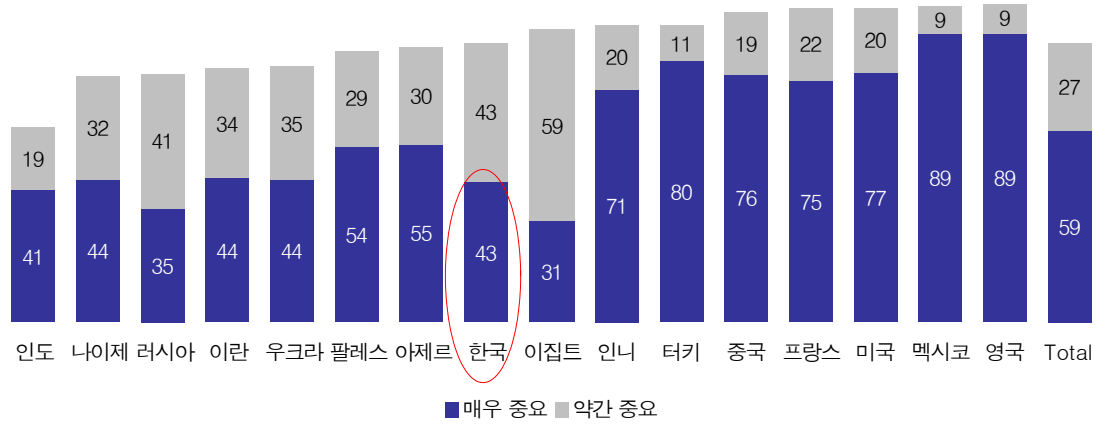
.

[그림1] 16개국 인종 및 남녀차별 폐지 문제에 대한 공감대와 중요성 절감 비율

(1) 인종차별 해결의 공감대/중요성



(2) 양성차별 해결의 공감대/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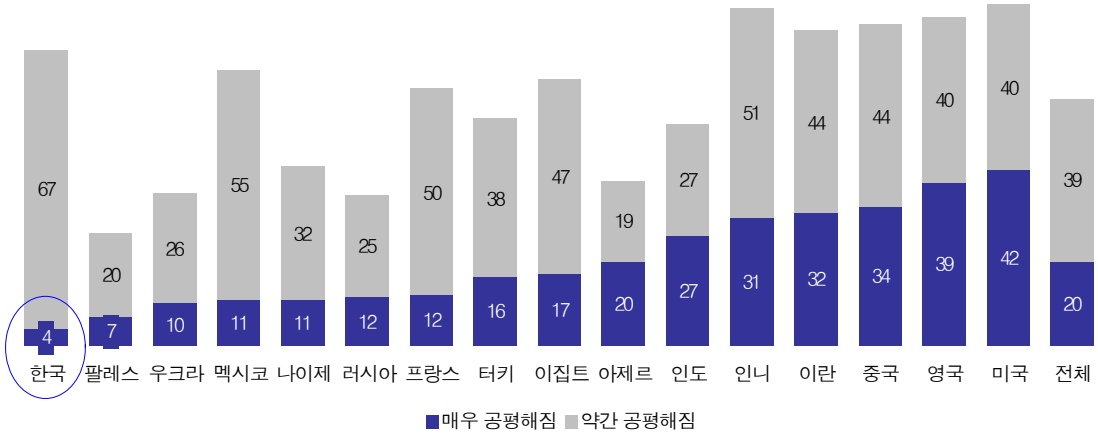


주1. 공감대는 “매우 중요하다+약간 중요하다”로 긍정적 평가한 비율이며, 중요성 절감도는 이 중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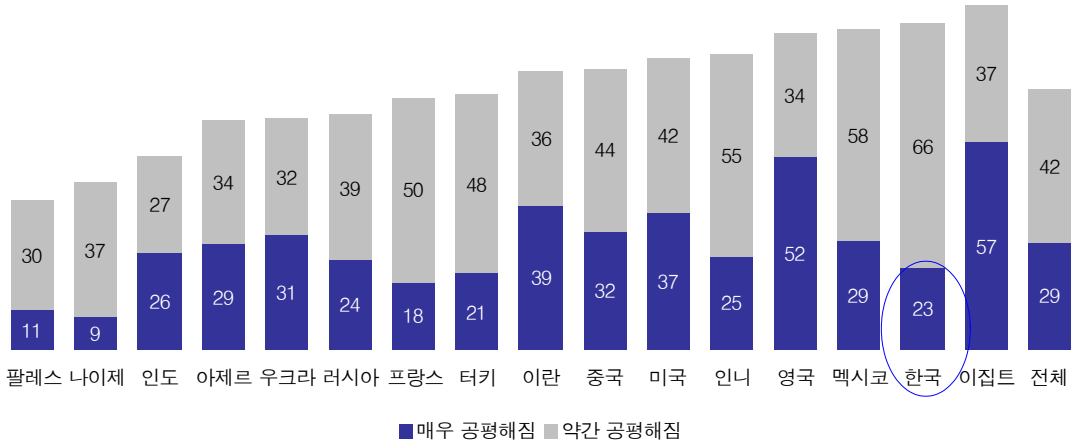
주2. 부정적 인식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포함되고, 기타 “모름/무응답”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보기가 있었지만 실제 응답비율은 미미했다.

[그림2] 16개국 인종 및 양성차별 개선도 평가

(1) 인종차별 개선도



(2) 여성차별 개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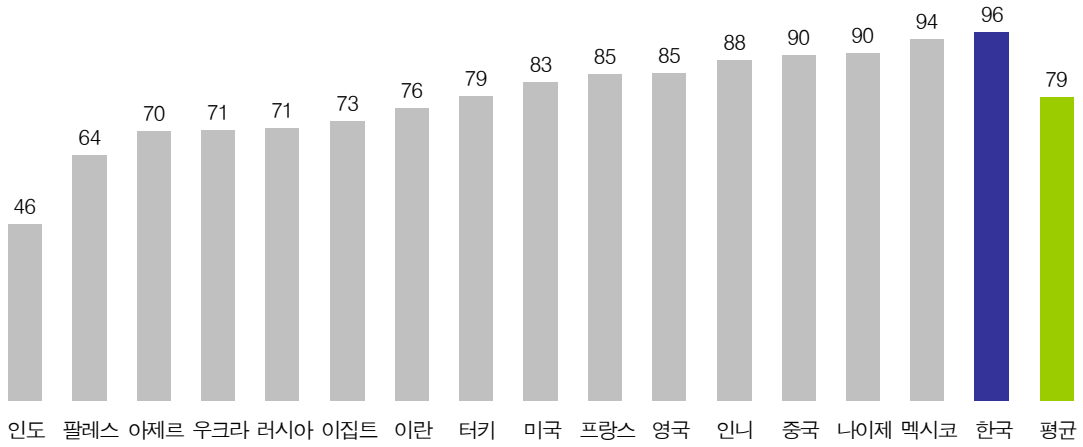
주1. 1. 매우 공평해짐 2. 약간 공평해짐, 3. 별 차이 없다 4. 약간 불공평해짐 5. 매우 불공평해짐 중 1과 2의 응답만 표기

□ 인식과 현실의 갭 정부가 나서라,
·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구 선진국에서도 정부개입 찬성, 아시아권은 더 높아
· 인종차별 해소위한 정부개입 찬성 “세계 평균 79%, 한국 96%” 조사국 중 1위

세계인은 인종평등의 인식확산과 개선현실의 갭을 메우기 위해 각 국 정부가 나서야 할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 16개국 전체 응답자 중 열 명 중 여덟 명이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앞서 인종차별 문제에 둔감한 것으로 나타난 인도, 아제르바이젠, 러시아 국민들이 마찬가지로 정부가 나서길 꺼린 반면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종차별 개선과 해결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83%), 영국(85%), 프랑스(85%) 등 서구 선진국에서도 인종문제 해결의 경우 정부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 국가들에서 정부책임을 강조하는 인식이 더 두드러졌다. 중국국민의 90%, 인도네시아 국민의 88%가 인종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개입에 지지를 보냈다. 한국의 경우 주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을 정부의 역할에서 찾는 경향이 강한데, 인종차별 문제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인종/민족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한국에서는 무려 96%로 조사를 진행한 16개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그림3].

[그림3] 인종차별 해결, 정부의 책임론



주1.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는 보기 중 개입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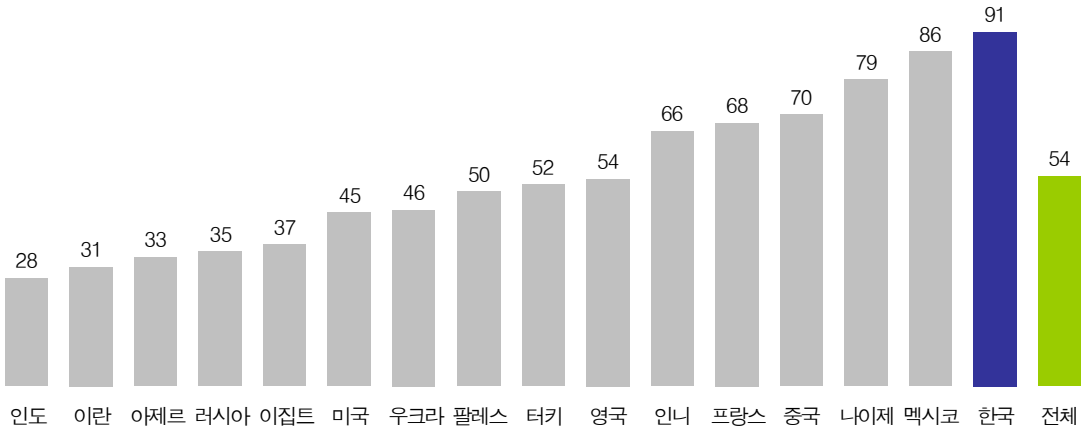
□ 정부개입의 크기에 대해서는 의견 엇갈려,
· 현 수준 충분 22%, 정부의 역할 확대해야 54%, 과도하다 5%, 줄여야 한다 12%
· 인종차별 “정부역할 더 확대해야” 세계 16개국 54%, 한국 91% “조사국 중 1위”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할 정당성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입장 차이가 존재했다. 인종차별 해소를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정부의 역할 확대 여부를 물어본 결과 16개국 응답자 중 22%는 현재 수준으로 충분하다고 답하고, 5%는 오히려 과도하다는 응답이었으며, 12%는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주목할 점은 인종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인권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국가들일수록 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91%), 멕시코(86%), 중국(70%), 프랑스(68%), 인도네시아(66%) 등이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이들 국가들에서 정부 역할이 충분하다거나, 줄여야 한다는 인식보다는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인종문제에 대한 정부개입 확대를 요구한 16개국 평균 응답율 54%를 크게 상회하는 국가들이다([그림5]의 갈등형),

하지만 인도나 러시아처럼 인종 문제에 둔감했던 인도, 러시아에서는 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하는 데 미온적이다. 반대로 인종 및 성차별 문제를 매우 중요한 문제로 여기면서 동시에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가 상대적으로 강한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서구 국가들 역시 인종차별 해결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율은 80% 이상이었지만 그 역할을 현재 보다 확대하는 데에는 미온적이다.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미국국민의 45%, 영국국민의 54%만이 정부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성문제에 대한 정부역할 확대를 요구한 16개국 응답 평균 53%를 크게 앞서고 있는 결과다[그림4].

[그림4] 인종차별 해결을 위한 정부 역할의 확대 찬성(%)



주1. 각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만 물어본 질문
주2. 1. 정부가 충분한 역할하고 있다. 2. 정부가 더 많은 노력 기울여야 3. 정부는 더 이상 역할 하지 말아야 4.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개입해왔다 중 더 많은 노력 기울여야 하단다는 2번 응답 비율

□ 각국 인권 아젠다의 사회적 압력 유형 분석 : 선도형 · 갈등형 · 예방형 · 잠복형

- · 미국, 영국은 중요성 인식수준도 높고 크게 공평해지고 있다는 평가
- · 인식수준에 비해 개선도 낮은 국가(프랑스 · 멕시코 · 인도네시아, 한국 등)에서는 사회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 높아
- · 한국 : 높은 인종평등 공감도(71%) 에 비해 개선도 평가 최하(4%) "갈등형"

각 인권 아젠다별로 이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도와 실제 각 나라의 인종 문제의 개선정도에 대한 인식차이를 통해 개별 국가들이 갖고 있는 인권의식 특징을 크게 네 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선도형 유형이다. 영국이나 미국처럼 인종차별 철폐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면서 현실에서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인식도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다.

둘째, 국민들이 각 인종차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강도는 약하지만 이들 문제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믿는 경우로서 갈등이 사전에 예방되고 있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인종차별 문제에 있어서는 이란이나 인도의 경우가 이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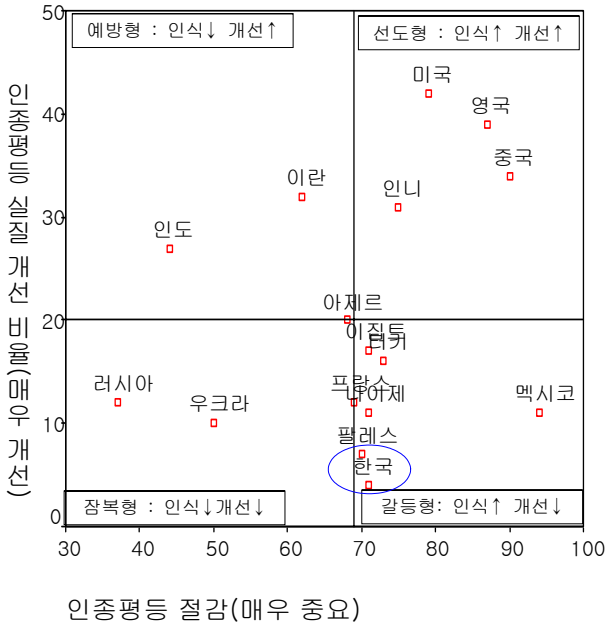
셋째, 인종평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현실에서의 개선 정도는 오히려 낮은 국가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 멕시코, 프랑스, 나이제리아, 한국, 팔레스타인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 이들의 높은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정부개입에 매우 적극적인 경향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 실제 체감도도 떨어질 뿐 아니라 실제 개선된 정도도 미약하다고 보는 인식이다. 현실에서의 개선정도에 대한 불만이 있지만 이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는 강도도 약해 잠재적 불만이 사회적 갈등으로 직접 표출되지는 않는 잠복형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인종차별 이슈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답한 비율이 71%인 반면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4%에 불과하여 인식과 현실의 괴리가 매우 큰 국가로 나타났다. 이후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 문제 등이 중요한 사회갈등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반해 양성평등 이슈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 남녀 권리의 불평등 문

제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평가는 23%에 불과해 전체 응답국 평균 29%에 못 미쳤지만 양성 불평등 문제를 절박하게 인식하는 비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낮아 젠더 아젠다가 당장 표면위로 부상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림5 참조].

[그림5] 양성평등 인식과 각 국 양성평등 개선도 평가에 따른 인식유형 분류



주1. 기준선은 16개국 각국 응답 평균비율 : 인종평등(매우 중요 69%, 크게 개선 20%)
주2. 여기서 ‘높다’, ‘낮다’는 평가는 절대적인 의미가 아니라 ‘평균’보다 높다 혹은 낮다는 상대적인 의미이다.

주제2. 한국 인종/민족 평등의식의 허와 실
포괄적 인종평등의식 높지만, 경제적 이해관계 걸릴 땐 생각 갈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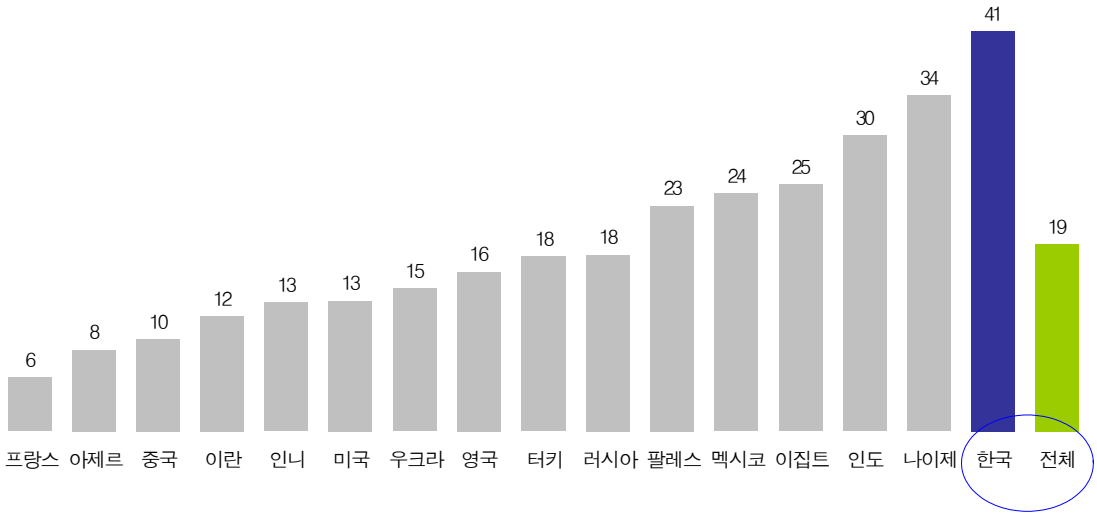
□ 한국인, 고용 시 인종차별 허용해야 41%, 세계평균 19%, 16개국 중 가장 높아
□ 한국인, 정부가 인종에 의한 고용차별 막아야 한다 53%, 세계평균 60%에 못 미쳐

한국인이 인종차별 철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을 인정하는 비율은 조사국 중 수위를 다툴 정도로 높았다. 그러나 시야를 좁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종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16개국 중 가장 높았다. 인종차별 문제를 바라보는 한국인의 이중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16개 조사국 전체 결과는 고용주가 인종을 이유로 고용하지 않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이 19%, 이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75%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고용주가 인종에 따라 고용차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41%로 전체 평균 19%의 두배를 넘었다. 반면 고용시 인종차별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 평균 75%에 크게 못 미치는 58%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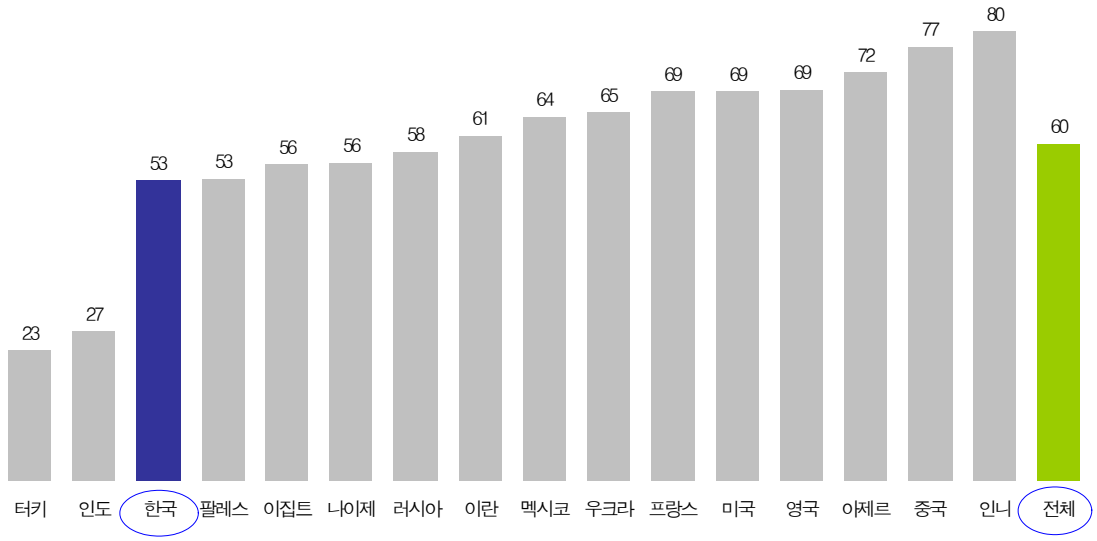
국내 여론만 보면 고용 시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여론이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보다는 더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열 명 중 네 명에 이른다는 결과는 충격적이다. 특히 고용 시 인종차별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조차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절반수준(53%)에 그쳤다. 일반적으로 인종차별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한국인의 91%가 동의했던 것과 크게 대비되는 결과이다.

[그림1] 인종에 따른 고용제한 “허용해야 한다” (%)



주1. 1. 허용해야 한다. 2.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중 1번 응답비율

[그림2] 고용 시 인종차별 막는 것은 정부책임



주1. 인종에 따른 취업제한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만 물어본 질문
주2. 1. 정부가 고용차별을 막을 책임이 있다 2.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중 고용차별을 막을 책임이 있다는 응답 비율

□ 인종별 고용제한 철폐를 계층별 인식격차 존재
· 고용 시 인종차별 해소에 소극 계층 : 저학력 · 50대 이상 · 100만 원 이하 저소득층
· 고학력 · 20-30대 : 고용 시 인종차별 반대여론 높아

고용 시 인종차별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 및 계층별로 뚜렷한 인식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세대별로 보면 젊은 세대들이 인종을 이유로 고용차별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 강한 반면 40대, 50대 이상으로 갈수록 허용하자는 입장이 강하다. “고용 시 인종차별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20대, 30대에서 32%에 불과한 반면 40대에서는 44%, 50대 이상에서는 50%에 달했다. 또한 학력별로 보더라도 대재 이상의 고학력층에서는 인종차별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36%로 낮았지만 중졸이하(55%), 고졸 층(51%)에서는 과반수 이상이 인종차별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소득별로 보면 월소득 100만원이 안되는 저소득계층에서 인종차별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 과반수에 근접하는 등 다른 소득계층과 차이를 보여준다[그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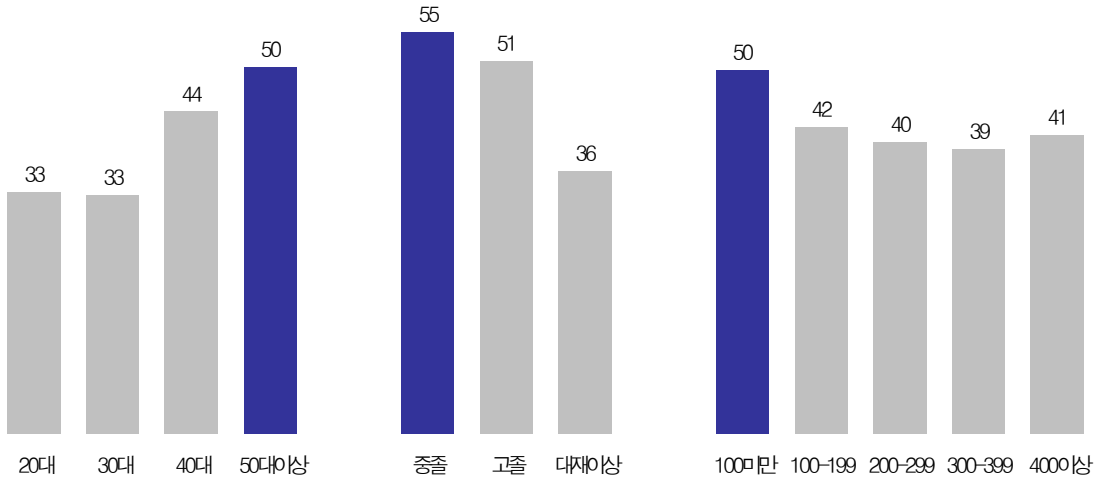
결국 이상의 고용영역에서 인종차별 문제에 비토의사를 갖는 층은 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과의 일자리 경쟁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저학력 · 저소득 · 고령 노동층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용문제에 관한 한 인종차별의 문제가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상충할 경우 인종차별을 철폐하자는 당위적인 인식과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현실적 사고가 혼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계층별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격차가 심화되고 나아가 폐쇄적인 인종차별 관행을 고수할 경우 국제인적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세계화 시대에 심각한 국내사회 뿐 아니라 외교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실제로 국제사회는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인종차별적 요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2007년 8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사회의 단일민족 신화의 폐쇄성에 주목하면서 한국정부가 단일민족 국가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을 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한국사회가 스스로 다민족적 성격(multi-ethnic character)을 가진 사회라는 것을 인정(recognize)”하고 한국정부에 각종 제도

및 법적 정비를 권고한 바 있다.

결국 한국은 타인종/ 타민족에 대해 '닫힌' 인식과 태도를 더 이상 고수할 수 없는 안팎의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그림2] 고용 시 인종차별 허용해야 한다(%)



☞ 국제인종차별철폐의 날

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유엔은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샤프빌(Sharpeville) 항쟁을 기념한다는 뜻으로 제2142 유엔 결의안을 통해 매년 3월 21일을 국제인종차별철폐의 날로 지정했다. 국제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유엔 인권위원회와 산하 기관 및 유네스코는 다양한 행사와 출판 활동 등을 통해 인종차별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나가고 있다.

[관련링크]
UNESCO:
http://portal.unesco.org/shs/en/ev.php-URL_ID=11805&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
UN: http://www.un.org/depts/dhl/racial/

☞ 세계 여성의 날

International Women's Day

1908년 3월 8일, 의류업종에 종사하는 미국 여성노동자 1만5천여 명이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참정권 보장 등을 위해 투쟁한 것을 기념하여 1910년 독일의 노동운동 지도자 클라라 제트킨이 제창하여 제정된 날로 매년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의 성취 과정을 알리고 기리는 날이다. 1977년부터 유엔도 이날에 맞춰 공식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치적 행사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문화 축제 형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참조 Wikipedia